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10년도 제7차 회의

1. 일 자 2010년 3월 25일 (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성 태 위 장 (총재)
심 훈 위 원
박 봉 흠 위 원
김 대 식 위 원
최 도 성 위 원
강 명 현 위 원
이 주 열 위 원 (부총재)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이 용 결 기획재정부 제2차관 강 태 혁 감 사
송 창 현 부총재보 김 재 천 부총재보
장 병 화 부총재보 이 광 준 부총재보
이 상 우 조사국장 정 희 전 정책기획국장
민 성 기 금융시장국장 안 병 찬 국제국장
유 병 갑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정 희 식 공보실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11호 — 2009년도 연차보고서(안)>

(1) 2010년 3월 11일 제6차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였던 의안 제11호 - 「2009년도 연차보고서(안)」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주관위원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2009년도 연차보고서(안)」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당행의 정책대응과 위기 극복과정을 분석적으로 기술하고 전년에 이어 독자 친화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기술되었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2009년 2/4분기 이후 금융시장이 안정기조를 되찾고 실물부문이 빠르게 회복되는 과정을 경제 여건 및 상황 변화에 맞추어 충실히 기술한 점, 둘째, 위기 극복과정에서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당행이 실시한 기준금리의 큰 폭 인하, 외화 및 원화 유동성 공급 확대 등과 같은 정책대응 노력을 강조한 점, 셋째,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주요국 재정정책 운용과 과제」 등 주요 이슈 사항을 보충설명을 통해 기술하고 그 래프 양식도 통일하는 등 독자 친화성을 더욱 제고한 점 등임

한편 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한 보고서(안)의 주요 수정·보완사항은 다음과 같음

첫째, 2009년중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과정과 당행의 정책 노력이 충실히 설명되도록 일부 사항을 수정·보완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은행자본확충펀드와 관련한 유동성 공급 부문을 보다 상술한 점, 당행의 정책 내용 및 결과가 부각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명확하게 밝힌 점, 국제컨퍼런스 개최 내용 등을 추가하여 대외협력 노력을 강조한 점 등임

둘째, 보고서 내용 및 표현의 명확성과 논리성을 제고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위기대응 과정에서 확대 공급하였던 원화 및 외화 유동성의 환수시점 및 환수정도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여 기술한 점, 기준금리의 결정이 ‘물가안정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시한 점, 물가안정목표의 변동 허용폭 확대, 미 달러화 약세, 총외채 비율 상승 등에 대한 배경 또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점 등임

(2)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2009년도 연차보고서(심의위원회안)(생략)

〈의안 제12호 —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10년 3월)(안)〉

(1) 2010년 3월 11일 제6차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였던 의안 제12호 -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10년 3월)(안)」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주관위원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금번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중점을 두고 작성되었음

첫째, 정책운영에 있어 해외부문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세계경제 내용을 더욱 보강하였음. 둘째, 금융·경제동향 부문(제Ⅰ장)에서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 개선추세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되 선진국 경기의 본격 회복 지연, 국제금융시장의 국지적 불안 발생 등 국외여건이 어려웠던 점을 함께 설명하였음. 셋째, 통화신용정책 운영 부문(제Ⅱ장)에서 전반적인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한 배경을 상세히 기술하였음. 넷째, 통화신용정책 운영여건 및 방향 부문(제Ⅲ장)에서 작년 12월 조사국 경제전망을 토대로 이후의 상황 변화를 반영하였음

한편 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한 보고서(안)의 주요 수정·보완사항은 주택 가격 동향 기술시 주요국의 흐름과 차별화된 점을 명시한 점, 유동성 상황 기술시 기업자금사정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 점, 장기시장금리 동향 기술시 회사채와 국고채간 금리스프레드가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인 배경을 추가한 점, 2010년 이후 물가안정목표 변경 내용을 명확히 기술하고 변경 이유를 추가한 점 등임

(2) 심의결과

심의위원회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10년 3월)(심의위원회안)(생략)

〈의안 제13호 — 금융기관 자본확충 지원과 관련한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대한 대출 실시(안)〉

(1) 담당 부총재보가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 은행자본확충 SPV유한회사의 보유증권 처분실적 등을 고려하여 2010년 3월 31일 만기도래하는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대한 대출 3조 2,966억원 중 3조 936억원을 재대출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 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본 안건과 관련하여 2010년 3월 22일 개최된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기획국장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일부 위원은 은행자본확충펀드 보유 후순위채의 시장매각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부진한 이유를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일부 후순위채의 매각이 수요처 확보 어려움 등으로 무산되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은행자본확충펀드 보유 신종자본증권의 시장매각 여건 및 방안에 대해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시장 수요기반이 취약하여 대규모 조기매각이 어려운 데다 발행은행의 자체 매입도 금융감독규정상 발행 후 5년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며 다만, 동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 등은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당행 대출금의 장기고정화를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대외신인도 제고, 높은 자본비용 경감 등을 위해 은행자본확충펀드 관련 당행 대출을 조기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동 펀드 보유 신종자본증권의 처분방안을 보다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한편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대한 대출 실시 원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출액중 최소 1조원 이상을 조기상환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첫째, 향후 경기 불확실성이 크지만 최근 경기가 회복세를 보인 이후 한국은행이 위기사 예외적으로 공급한 유동성을 회수하는 등 실질적으로 출구전략을 시행하고 있는 점, 둘째, 금리인상은 경제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주고 시장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출구전략의 맨 마지막에 시행되어야 하는 점, 셋째, 아직 회수하지 않고 있는 예외적 유동성 지원조치인 은행자본확충펀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향후 출구전략 방향에 대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넷째, 2009년말 국내은행의 자본적정성 수준이 BIS 자기자본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보다 양호한 수준인 점 등임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다만, 강명헌 위원은 이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본안의 부대 조건에 “대출만기 전에 최소 1조 1,200억원을 조기상환 해야 한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명시할 것을 주장하였음)

의결사항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지원과 관련하여 불임과 같이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대한 대출을 실시할 것을 의결한다.

〈불임〉 금융기관 자본확충 지원과 관련한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대한 대출 실시(안)

(한국은행 홈페이지 ‘통화정책-금융통화위원회-의결사항’

또는 2010년 4월호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의 주요활동-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 참조)

〈의안 제14호 — 2010년 2/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결정〉

(1) 의장이 「한국은행법」 제28조 및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의안 제14호 — 「2010년 2/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결정」을 상정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일부 위원은 그간 시행되어온 중소기업 지원조치 축소 방침 등으로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향후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어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사정이 다소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특별지원한도와 연계되어 있는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Fast-track program)이 금년 6월말까지 시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2010년 2/4분기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는 전분기와 동일한 10조원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음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시장금리가 급격히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에서 과도한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당행이 의도하지 않은 과도한 완화기조를 조성하여 성장잠재력 저하, 금융시장 효율성 저해 등 다양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므로 당행의 금융정상화 시그널링을 시장에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조기에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동 위원

은 이를 위해 특별지원한도를 조기 축소하고 여타 자금들의 한도도 취약부문인 지방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지역본부한도 확대를 위해 점차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경기 회복세가 나타난 이후 한국은행이 이미 실질적인 출구전략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 위기대응과정에서 예외적으로 확대한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축소하여 출구전략 방향에 대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는 점, 총액한도대출이 중소기업대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2/4분기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일부 감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음

한편 다른 일부 위원은 기준금리를 움직이지 않고 총액한도대출 한도 축소 등의 조치만 취하는 것은 실질적인 유동성 감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시그널링 효과 대신 중소기업 지원 조기종단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전분기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다만 동 위원은 총액한도대출의 특별지원한도중 일부를 지역본부별 한도 증액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총액한도대출 한도 축소가 출구전략의 시작이라는 의미보다 그 반대인 당분간 금리동결이라는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정책금리 변경없이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것은 민간부문이 아닌 다른 부문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오히려 자금공급의 생산효율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2/4분기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일부 위원은 당초 계획된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의 운용시한이 2/4분기 말까지로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동 기간까지는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이전 수준으로 유지하고 3/4분기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3) 심의결과

의결문 작성·가결

(다만, 강명현 위원은 이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특별지원한도 2조원중 1조원을, 증액된 3개 자금 한도 1조 5,000억원중 7,500억원을 각각 감축할 것을 주장하였음)

의결사항

2010년 2/4분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10.0조 원으로 정한다.

<정부측 열석자 발언>

한편 의장은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정부측 열석자인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발언권을 부여하였으며 이에 차관은 국가채무 현황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략히 설명하였음

지난 금융위기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 금년말 기준 약 407조원, GDP대비 36%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정부는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13년 또는 2014년에 재정수지는 균형으로, 국가부채는 GDP 대비 35~36% 수준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 등을 목표로 하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였음. 정부는 향후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 또한 최근 급격히 늘어난 공기업부채에 대해서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동 관리방안을 강구할 계획임